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 Vol. 4

May 3, 2022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는 앞으로 주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이나 뉴스를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년 vol. 4.)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 내용
I. 보도자료	
공정위, 2021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 분석·발표 3. 30.	• (이슈) 2021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1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분석 발표
제1호 일반지주회사 설립 CVC 등록완료 3. 31.	• (이슈) 일반지주회사 설립 CVC 최초 등록 완료 • (주요내용)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이후 최초의 CVC 설립 및 등록 •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i) CVC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ii)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개선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iii) 등록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힘
공정거래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 4. 4.	• (이슈) 세계 주요 경쟁당국의 국제협력 논의 • (주요내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세계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선 및 디지털 문제 등을 논의

이슈	주요 내용
<u>공정위, 전속고발권, 플랫폼 규제 및 특수관계인 범위조정 관련 보도 해명</u> 4. 4.	• (이슈) 전속고발권, 플랫폼 규제 및 특수관계인 범위조정 관련 공정위 입장 • (주요내용) 공정위는 미고발 사유서 작성 제도 추진, 플랫폼 규제법안 및 특수관계인 범위조정과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
<u>공정위,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 긴급 점검 실시</u> 4. 6.	• (이슈) 하도급법 관련 실태조사 • (주요내용)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발표
<u>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법령 개정 추진 관련 해명</u> 4. 6.	• (이슈)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외국인 동일인 지정 근거 마련 • (주요내용) 공정위가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외국인 동일인 지정 근거 마련, 사익편취 가능한 모든 대상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u>공정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u> 4. 7.	• (이슈)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 운영지침 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4. 7.부터 4. 27.까지 행정예고 실시
<u>공정위,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 관련 해명</u> 4. 7.	• (이슈)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안 • (주요내용)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입법 불발 가능성이 커지자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관련 규제 조항을 삽입하려 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u>공정위,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제한 관련 해명</u> 4. 11.	• (이슈)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제한 • (주요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증권회사가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도입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공정위가 제동을 걸어 일부 증권회사가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 종목에 대해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u>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익명제보 센터 구축·운영</u> 4. 12.	• (이슈) 납품단가 조정 신고 센터 • (주요내용) 공정위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 및 운영할 예정

이슈	주요 내용
공정위와 검찰, ‘전속고발권’ 수정 논의 관련 해명 4. 17.	• (이슈) 전속고발권 수정 논의 • (주요내용) 검찰과 공정위가 비공식 협의체를 만들어 ‘전속고발권 수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을 전속고발권 유지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공정위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여부 관련 해명 4. 17.	• (이슈)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여부 • (주요내용) 공정위는 인수위와 공정위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 19.	• (이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7. 12.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과 관련하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공정위, 물류·IT서비스 거래 공시 관련 해명 4. 25.	• (이슈) 공시대상기업집단 물류·IT 서비스 거래 공시 • (주요내용) 기업집단의 전체 소속회사의 모든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물류·IT서비스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거나, 공시로 인하여 산업기술, 영업전략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공정위, 사전조사 관련 해명 4. 26.	• (이슈) 사건등록 전 사전조사 • (주요내용) 공정위의 사건등록 전 사전조사 시 사실상 강제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공정위, 2022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4. 27.	• (이슈) 2022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2. 5. 1. 자로 76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47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임
II. 주요 소식	
인수위, 향후 정책 추진 방향 제시 3. 31.	• (이슈) 인수위, 향후 정책 추진 방향 제시 • (주요내용) 인수위는 최근 공정위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
대법원, ‘독점계약 방해에 3배 배상’ 미국 판결 승인 취지 파기환송 3. 31.	• (이슈)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승인 및 강제집행 허용 여부 • (주요내용) 대법원은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의 원칙이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독점계약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이 허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파기환송함

이슈	주요 내용
법무부, 공정거래조사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추진 4. 8.	• (이슈) 공정거래조사부 추가 확대 움직임 • (주요내용)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를 2개 부서 · 4개 팀으로 직제 개편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공정거래법 개정 및 규제완화 기대감에 CVC 설립 잇따라 추진 4. 12.	• (이슈) CVC 설립 • (주요내용)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 및 차기 정부의 CVC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라 대기업들이 CVC 설립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음
검수완박 땀 공정위 고발사건도 경찰로... 수사 장기화 불가피 4. 18.	• (이슈) 검수완박 법안이 공정거래 관련 기업 사건에 미치는 영향 • (주요내용)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검찰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수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되어 공정위 전속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
인수위, 대기업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유력 검토 4. 18.	• (이슈) 대기업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 (주요내용) 인수위는 대기업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함
인수위·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 납품단가 조정 방안 논의 4. 19.	• (이슈)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 • (주요내용) 인수위는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납품단가 조정안을 논의함
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금감원, CVC 간담회 개최 4. 20.	• (이슈)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간담회 • (주요내용) 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금감원은 4. 20. 간담회를 개최하여 CVC 제도 안착 방안을 논의
인수위, 검찰에 공정위 직원 파견 검토 4. 21.	• (이슈) 공정위와 검찰 간 인사 교류 확대 • (주요내용) 인수위는 공정위 직원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파견하는 등 검찰과 공정위 간 인사교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공정위-검찰, 고발 전 협업 추진 4. 25.	• (이슈) 공정위-검찰, 고발 전 협업 추진 • (주요내용) 공정위와 검찰은 최근 ‘비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발 전 협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이슈	주요 내용
공정위, 셀프빨래방 표준약관 마련 예정 4. 25.	• (이슈) 셀프빨래방 표준약관 제정안 마련 • (주요내용) 공정위는 올해 3분기 중 셀프빨래방 관련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III. 국회 발의법안	
<u>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 (이정문 의원안) 국회제출</u> 4. 1.	• (이슈)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의원은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 (송재호 의원안) 국회제출</u> 4. 1.	• (이슈)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송재호 의원은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의원안) 국회제출</u> 4. 4.	• (이슈) 약관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송재호 의원은 약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안) 국회제출</u> 4. 7.	• (이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u>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 (이정문 의원안) 국회제출</u> 4. 11.	• (이슈)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의원은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 (이정문 의원안) 국회제출</u> 4. 11.	•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대리점법 일부개정안 (이정문 의원안) 국회제출</u> 4. 11.	• (이슈)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의원은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이슈	주요 내용
<u>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u> <u>(민형배 의원안) 국회제출</u> 4. 14.	• (이슈)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u> <u>(민형배 의원안) 국회제출</u> 4. 14.	•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u> <u>(이동주 의원안) 국회제출</u> 4. 15.	•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산자위 소속 이동주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u> <u>(오기형 의원안) 국회제출</u> 4. 20.	• (이슈)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의원은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년 Vol. 4)

I. 보도자료

1. 공정위, 2021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 분석 발표 (3. 30.)

- 공정위는 3. 30. 2021년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심사 동향)** (i) 경쟁저해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집중심사를 진행한 건은 34건이고 이중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본 1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으며, (ii)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정을 위반한 30건을 적발하여 총 42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주요 특징)** (i) 기업결합 신고건수와 금액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의 신성장 분야 투자 및 사업구조 재편 등이 활발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도 반등하여 회복세로 보이고 있으며, (ii)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이 다양한 사업영역에 걸쳐 이뤄졌으며, 혼합결합에 해당하는 형태가 많았음
 - **(시사점 및 향후계획)** 공정위는 (i) 기업결합 건수 증가에 따른 심사 부담과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기업결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심사기구 보강 등 효과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ii)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제도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며, 플랫폼 기업 등 특정 산업분야에 적합한 시장획정 방법론 등 심사기준 개선을 검토할 것이고, 최근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관련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여 제도개편시 참고해 나갈 것임을 밝힘

2. 제1호 일반지주회사 설립 CVC 등록완료 (3. 31.)

- 2022. 3. 31. 개정 공정거래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된 후 최초로 CVC(동원기술투자) 설립 및 등록이 완료됨
 -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CVC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 하였음
 -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CVC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CVC 등록·운영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업계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협의체를 통해 대·중견 집단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등록 지원하는 등 재계와 적극 소통할 예정임
 -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또한 (i)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개선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ii)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CVC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 * 금감원은 대·중견집단의 벤처투자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신기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경우와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신속한 심사 추진

3. 공정거래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 (4. 4.)

-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4. 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한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
- 위 회의에는 전세계 30여 개국 경쟁당국 수장급이 참석하였으며, 빅테크 기업의 비수평적 기업결합과 관련된 경쟁 제한효과 측정방법 등 디지털 경제 현안과 경쟁당국간 국제협력방안을 논의
-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의 데이터 포털 구축 경험, 혁신사업에서의 기업결합 시장획정 방식 및 경쟁제한효과 판단 기준 구체화 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제공조방안으로 공동시장조사를 제안하였음. 아울러 (i) 한-미 및 (ii) 한-EU 양자 협의회도 개최하여 공정위와 양 경쟁당국 간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교류와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함
-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국 경쟁당국 기업결합·경제분석 실무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시 대화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4. 공정위, 전속고발권, 플랫폼 규제 및 특수관계인 범위조정 관련 보도 해명 (4. 4.)

- **(언론 보도)** 일부 언론에서 공정위가 (i) 인수위가 언급한 전속고발권의 객관적인 행사에 대한 이행방안으로, 미고발 사유서 작성과 함께 의무고발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ii)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폐기 수순에 들어갔으며, (iii) 대기업집단 동일인 특수관계인 범위를 좁히는 방안의 시행이 유력하다는 취지로 보도
- **(공정위 해명)** 공정위는 (i) 미고발 사유서의 작성을 검토하거나 인수위에 보고한바 없고, (ii)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 및 (iii)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공정위가 논의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

5. 공정위,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 긴급 점검 실시 (4. 6.)

-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조사배경)** 코로나19장기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철강, 비철금속 등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세가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하도급법상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수급사업자의 어려움 가중
 - * 하도급법 제16조의2는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조정 조항의 계약서 명시 및 조정협의 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조사기간·대상)**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제지류 등)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 **(조사 내용)** (i)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조항의 하도급 계약서 반영 여부(및 계약서 교부 여부), (ii) 납품단가의 조정 요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iii) 실제 대금 조정이 이루어져 단가에 반영되었는지 등 조정협의제도 활용 실태 전반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조정조항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

6.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법령 개정 추진 관련 해명 (4. 6.)

- **(언론 보도)** 한 언론은 4. 6., 공정위가 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기존 혈족 6촌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고,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익편취 가능한 모든 대상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익편취 규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 **(공정위 해명)**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동일인 지정 기준 개선 등에 대해서 인수위와 논의한 적이 있지만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

7. 공정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4. 7.)

- 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4. 7.부터 4. 27.까지 행정예고 실시
- 공정위는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지자체가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
 - 제정안은 중복신청시 처리 방법, 신청의 보완 절차, 다수인 공동 신청시 대표자의 권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방법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
 - 조정의 각 단계에서 분쟁당사자와 공정위, 시·도에 대해 통지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여 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조정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임

8. 공정위,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 관련 해명 (4. 7.)

- **(언론 보도)** 한 언론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입법 불발 가능성이 커지자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관련 규제 조항을 삽입하려 하고, 우회 규제를 통해 권한 확보에 매달리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
- **(공정위 해명)**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은 온플법 입법과 무관하게 2021년 초부터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추진해오고 있었다고 해명

9. 공정위,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제한 관련 해명 (4. 11.)

- **(언론 보도)** 한 언론은 4. 11.,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증권회사가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도입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어 일부 증권회사가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 종목에 대해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도
- **(공정위 해명)** 공정위는, (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증권회사 중 상호·순환출자가 발생하는 일부 상장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의 종목에 대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는 전면 허용되므로, 증권회사들이 해당 증권회사의 계열회사 종목에 대해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전부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ii)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부득이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위가 이 서비스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10.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익명제보 센터 구축·운영 (4. 12.)

- 공정위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 및 운영할 예정
 - **(도입 배경)**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을 가지며,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등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 **(기능)**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시 및 제재를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하여 (i)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를 익명으로 제보 받고, (ii)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애로 상담을 진행하며, 분쟁조정 및 신고절차를 안내하도록 할 예정

11. 공정위와 검찰, ‘전속고발권’ 수정 논의 관련 해명 (4. 17.)

- **(언론 보도)** 한 언론은 4. 17., 검찰과 공정위가 비공식 협의체를 만들어 ‘전속고발권 수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전속고발권 유지의 대안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 **(공정위 해명)** 공정위는, (i) 공정위와 법무부가 공약 사항인 ‘전속고발제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행사’를 위해 협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ii)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논의 대상이 아니며 공정위와 검찰이 전속고발권 수정을 논의한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12.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여부 관련 보도 해명 (4. 17.)

- **(언론 보도)** 한 언론은 4. 17.,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난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자 인수위와 공정위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고 보도
- **(공정위 해명)** 공정위는, 인수위와 공정위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다만 인수위와 공정위가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

13.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 19.)

- 공정위는 2022. 7. 12.로 예정되어 있는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 4. 19. 부터 5. 30.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 개정 하도급법이 일정 분야 거래 당사자들로 하여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해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청구)** 사업자들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 **(표준하도급계약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및 운영 방식을 명시하고, 관련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의3)
-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원·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14.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물류·IT 서비스 거래 공시 관련 해명 (4. 25.)

- **(언론 보도)** 한 언론은 4. 24. 공정위가 (i) 71개 기업집단의 전체 소속회사(2,612개)의 약 2억 건이 넘는 모든 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물류·IT서비스 공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공시와 관련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ii) 공시 범위에 CCTV 설치 등 사소한 거래까지 포함되어 영업전략이나 세부적인 사업내용 등이 공시를 통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공정위 해명)** 공정위는, (i)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계열회사와의 물류·IT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거래현황에 대하여 공시할 의무가 부과되고, 물류·IT서비스 거래 여부는 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CCTV 및 수상·항공 등은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iii) 공시 양식에 따라 거래상대방, 업종, 품목 등 개략적인 내용만 공시하고 연 1회 사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므로 공시로 인하여 산업기술, 영업전략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함. 또한, 공정위는 기업부담을 경감하면서 공시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시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공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15. 공정위, 사건등록 전 사전조사 관련 해명 (4. 26.)

- **(언론 보도)** 한 언론은 4. 26. 공정위가 (i) 사전조사와 정식조사 관계없이 사실상 강제조사를 하고 있으며, (ii) 사내 법무팀에서 작성한 자료까지 수집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비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
- **(공정위 해명)** 공정위는, (i) 사건으로 등록하기 전 단계에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등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령상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며, (ii) ‘위원회 결정’으로 조사를 개시하고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해서 불복도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미국·EU와 우리나라 법체계·조직체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함. 또한,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과 사건처리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절차법제를 전면 개편하였고, 앞으로도 조사대상업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16. 공정위, 2022년도 대기기업집단 지정결과 발표 (4. 27.)

- 공정위는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을 5. 1. 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소속 회사 2,108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
 - 금년 지정의 특징은, (i) 상위 5개 기업집단 내 순위가 2010년 이후 최초로 바뀌었고, (ii) 해운·건설·IT 주력집단들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iii) ‘PEF 전업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집단’의 경우, 올해 지정에서 제외되었고, (iv) 두나무가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 중 최초로 지정된 것임
 - 공정위는 (i) 해당 대기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예정이며, (ii)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기업집단 지정기준은 향후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힘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

II. 주요 소식

1. 인수위, 향후 정책 추진 방향 제시 (3. 31.)

- 인수위는 최근 공정위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함
-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문제를 바로잡는 등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발표
 -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원도급업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구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공정위에 당부함
- 인수위는 이 외에도 (i)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등의 감시, (ii) 경쟁제한적 시장 관행과 규제 개선 등을 살필 예정임을 밝힘

2. 대법원, '독점계약 방해에 3배 배상' 미국 판결 승인 취지 파기환송 (3. 31.)

- 대법원은 '독점계약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해당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규율 영역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에서 실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위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파기환송함

3. 법무부, 공정거래조사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추진 (4. 8.)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를 2개 부서·4개 팀으로 직제 개편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1일부터 공정거래조사부장 아래 꾸려진 공정거래수사팀과 부당지원수사팀을 각각 공정거래수사1팀과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 등 3개 팀으로 재편하고, 공정거래조사부 인원을 기존 9명에서 15명으로 한차례 확대한 바 있음

4. 공정거래법 개정 및 규제완화 기대감에 CVC 설립 잇따라 추진 (4. 12.)

-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데 이어, 차기 정부가 CVC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기업들이 CVC 설립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음

5. 검수완박 댐 공정위 고발사건도 경찰로... 수사 장기화 불가피 (4. 18.)

-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범죄 등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사라짐
- 이러한 상태가 되면 검찰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거래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수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되는데,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전속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검찰 고발만을 명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경찰 고발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공정위 전속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임

- 설사 공정위 전속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관할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음

6. 인수위, 대기업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 유력 검토 (4. 18.)

- 인수위가 4. 18. 대기업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인수위 관계자는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안도 구상하고 있고 해당 내용이 국정과제 최종 명단에 오를 수도 있다고 밝힘

7. 인수위·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 납품단가 조정 방안 논의 (4. 19.)

- 최근 중소기업이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자 인수위는 공정위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모범계약서 마련·보급)** 인수위는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임. 모범계약서의 내용으로는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을 주기적으로 반영하거나, 원사업자·중소기업 간 협상으로 납품단가를 정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음
 -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반영)** 인수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 **(공시대상 기업집단 납품단가 조정 현황 공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한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
 - **(납품단가 관련 위법행위 엄정 대응)**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 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불응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임
 - **(납품단가 대협협상 활성화)**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을 대신하는 대협협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8. 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금감원, CVC 간담회 개최 (4. 20.)

- 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금감원은 4. 20.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정위 방침)** 공정위는 (i) CVC를 통한 투자·출자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마련하고, (ii) 온라인 보고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CVC 투자현황, 출자자 내역 등이 원활히 보고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힘
 - **(금감원 방침)** 금감원은 CVC 등록 관련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히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은 별도로 처리하여 신속하게 등록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힘

9. 인수위, 검찰에 공정위 직원 파견 검토 (4. 21.)

- 인수위는 공정위 직원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파견하는 등 검찰과 공정위 간 인사교류 확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고발을 검찰의 소추 요건으로 하는 전속고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공정거래법 제 129조 제1항), 인수위는 인사교류를 통하여 검찰과 공정위 간 공정거래 사건에 관한 공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10. 공정위 - 검찰, 고발 전 협업 추진 (4. 25.)

- 공정위와 검찰은 최근 비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발 전 협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특히 검찰은 대기업집단의 총수 사익편취 행위와 경성담합(입찰·가격담합 등)에 대해 적극적인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 여·야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협의체 관계자는 현 제도를 기반으로 협의를 마칠 예정임을 밝힘
- 또한 기관 간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와 검찰 간 인력 교류를 늘리는 방안을 인수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11. 공정위, 셀프빨래방 표준약관 마련 예정 (4. 25.)

- 공정위는 셀프빨래방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 제정안을 올해 3분기를 목표로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표준약관에는 (i) 소비자 세탁물 훼손을 막기 위해 세탁 및 건조 금지 의류에 대한 정보제공의무가 명시되고, (ii) 잔액환불 의무 및 결제 관련 시설관리 의무, 사업자 과실로 인한 세탁물 훼손 시 손해배상 의무 및 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임

III. 국회 발의법안

1.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이정문 의원안) 국회제출 (4. 1.)

-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의원은 사업자 등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20조 제2항)하는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2.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송재호 의원안) 국회제출 (4. 1.)

- 국회 정무위 소속 송재호 의원은 최근 SNS상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일명 뒷광고 논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인터넷,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품 등 또는 상표를 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소비자 및 메타버스 플랫폼의 다른 사용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안 제2조, 제3조의2 및 제20조)을 신설하는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3. 약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안) 국회제출 (4. 4.)

- 국회 정무위 소속 송재호 의원은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안 제17조의2 및 제20조)을 신설하는 약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안) 국회제출 (4. 7.)

-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은 국가가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도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해당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안 제10조 제4호)을 신설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5.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이정문 의원안) 국회제출 (4. 11.)

-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의원은 보다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안 제23조 및 제24조)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6.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이정문 의원안) 국회제출 (4. 11.)

-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의원은 보다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안 제25조 내지 제27조)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7.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이정문 의원안) 국회제출 (4. 11.)

-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의원은 보다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하는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8.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민형배 의원안) 국회제출 (4. 14.)

- 국회 정무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공정한 가맹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시 관련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를 강화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9.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민형배 의원안) 국회제출 (4. 14.)

- 국회 정무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 시 관련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신설)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10.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이동주 의원안) 국회제출 (4. 15.)

- 국회 산자위 소속 이동주 의원은 대규모 점포와 입점 점주 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규모 점포 입점 점주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 등 입점 점주 보호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 신설 등)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11.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오기형 의원안) 국회 제출 (4. 20.)

-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의원은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표시광고법에 따른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하는(안 제7조의2 제5항 신설)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